

투데이 칼럼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통과, 전북 사법 주권·복지 '새 지평'

12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의 높은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전주 가정법원설치법 법안 통과는 단순히 하나의 사법 기관이 들어서는 것을 넘어, 전북이 그간 겪어온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사법 평등권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쾌거로 평가받는다.

법안 통과로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전주가정법원은 전주 본원을 중심으로 군산, 정읍, 남원에도 지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북 전역에 균형 잡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가정법원은 단순히 분쟁만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 이혼, 상속 등 가사 사건부터 소년 보호,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후견과 복지적 기능이 강조되는 곳이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 지자체 중 가정법원이 없는 사법 소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일반법원에서 이러한 전문 사건들을 병행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왔다.

실제로 전주지방법원은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이나 더 많은



이만호 본보 정치부장

가사 사건을 처리해 왔음에도 전문 법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 도민들도 이제 전문 법관과 조사관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러한 결실의 뒤에는 전북 지역사회의 끈질긴 인내와 노력이 있었다.

특히 전북지방변호사회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과 임원진은 2021년부터 활동해 왔다고 한다.

특히,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지난 5년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관계 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득해 왔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끊임없이 지역 여론을 주도

하며 입법 추진력을 불어넣은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이번 법안 통과 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정치권의 전략적인 대응과 실천력 또한 결정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운 국회의원(전주시 을)은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 '향원일의 전북 사법 서비스 회복'이라는 공약을 마침내 실천으로 옮겼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발의에서부터 심사, 본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조율과 설득을 이끌어냈다.

특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료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그가 보여준 노고는 전주가정법원 유치의 일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공은 행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안 통과 직후 "도민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부터 도내 국회의원과 '윙킵' 공조 체계를 구축하며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앞으로 2028년 개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부지 확보와 청사 건립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대법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주가정법원의 탄생은 전북 사법 복지 시대의 화려한 개막을 의미한다. 위기 가정이 보호받고,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치유 시스템이 하루빨리 인차 되기를 기대한다.

지역사회의 연대와 정치권의 실천, 그리고 행정의 철저한 준비가 어우러져 일궈낸 이번 성과가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해 본다.

이번 전주 가정법원 설치법 통과가 만사지탄이지만 여러 국회의원과 법조인 등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독자제언

평온한 명절 노린 노쇼사기, 우리 모두의 경계 필요

명절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비대면 사기이다. 최근, 명절 선물 배송, 모바일 부고장, 교통범죄금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노쇼(No-Show)사기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상인을 울리는 예약 부도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를 노린 예약금 가로채기이다. 상인용 노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예약금을 미리 받는 방법이 있다. 예약금은 고객에게 약속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다. 두 번째는 고객 대량주문 신원확인이다. 명절 단체 회식이나 고가 메뉴 예약 시 연락처 외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가급적 선결제율 유도를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 고지이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노쇼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매장에 비치하거나

안내문에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용 명절 사기 예방은 첫 번째 비대면 개인 거래 주의이다. SNS나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급한 사정으로 속박권을 싸게 판다"라며 개인계좌 입금 유도를 하면 99% 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식예약체널을 이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입금 전 '경찰청 사이버방' 어플이나 '더치트'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사기이력을 반드시 검색한 후 확인하게 입금하는 것이다.

만약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또한 증거자료 보증을 위해 대화내용, 입금내역서, 판매 게시글들을 캡처해 두어야 한다. 국번없이 112로 전화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최대한의 피해를 막아야한다.

김동인 고창경찰서 1사단파출소 경위

설 명절의 약속, 안전운전

설 명절은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특별한 시기이다. 오랜만에 만날 가족을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길을 나서지만, 이 시기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 또한 크게 높아진다. 매년 설 명절마다 발생하는 교통사고 소식은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명절 기간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과속, 무리한 차로 변경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휴식을 미루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듣게 된다. 순간의 방심과 조금의 여유가 소중한 가족과의 만남을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꿀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초일 경찰로서 처음 맞이하는 설 명절 근무를 앞두고 현장을 떠올리면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안타까운 순간들 속에서,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있다. 단 한 번의 부주의가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멈추게 할 수 있기에, 시민 한 분 한 분이 지켜주는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관리와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교통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출발 전 충분한 휴식, 안전거리 확보, 제한속도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약속이 가장 확실한 사고 예방책이다.

이번 설 명절만큼 '안전운전'이라는 약속이 모든 가족의 평안한 명절을 지켜줄길 기대해 본다.

유재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설

부동산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부동산 잡기가 코스와 5천 달성보다 쉽다며, 집값 안정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도 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의지를 보여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보다 강한 어조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비정상적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아면서, '포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SNS에 적었다.

불법 계곡 정상화, 주식시장 정상화 같은, 과거 '정면 돌파'로 거둔 성과를 거론하며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 언급 뒤 서울 집값이 떨어졌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힌 건데,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며 투기성 다

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임을 내비쳤다.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와 5천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도 훨씬 쉽다고도 했다. 이번에는 공급 대책만 내놓지만,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정되지 않는다면 제재를 비롯한 다른 카드도 얼마든지 꺼낼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그렇게 쉬운 일이면 왜 아직 못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은 안 잡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세금 이야기를 꺼내 국민을 압박하고,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 하나를 근거로 마치 부동산을 다 잡은 듯..."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에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 뜻을 전하는 등 투기 세력과 싸우겠다는 뜻을 연일 밝히고 있다.

가속화 되는 메모리 증설 속도

최근 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을 기록했거나 가까웠던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금융권에서 6조 원이 넘는 자금을 발린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모은다.

업계에선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비 투자 확대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은행권에서 시설자금 용도로 발린 자금은 올 해 1월 말 잔액 기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2조6,700억 원) 대비 140.7%나 급증한 규모다. 양 사의 관련 대출 잔액은 2020년만 하더라도 5,000억원에 그쳤으나 매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삼성전자의 올 해 대출 잔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삼성전자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권 시설자금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는데 자금 조달 전략을 바꾼 것이다.

SK하이닉스의 최근 대출 잔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약 2,000억원) 늘었다. 양사가 은행권 차입을 늘리는 것은 고부가가치 메모리 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인 평택캠퍼스 5공장 공사에 착수했는데 여기에만 최소 5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평택캠퍼스 4공장의 2단계 라인도 첨단 메모리 라인으로 전환해 건설을 재개한 만큼 삼성전자의 투자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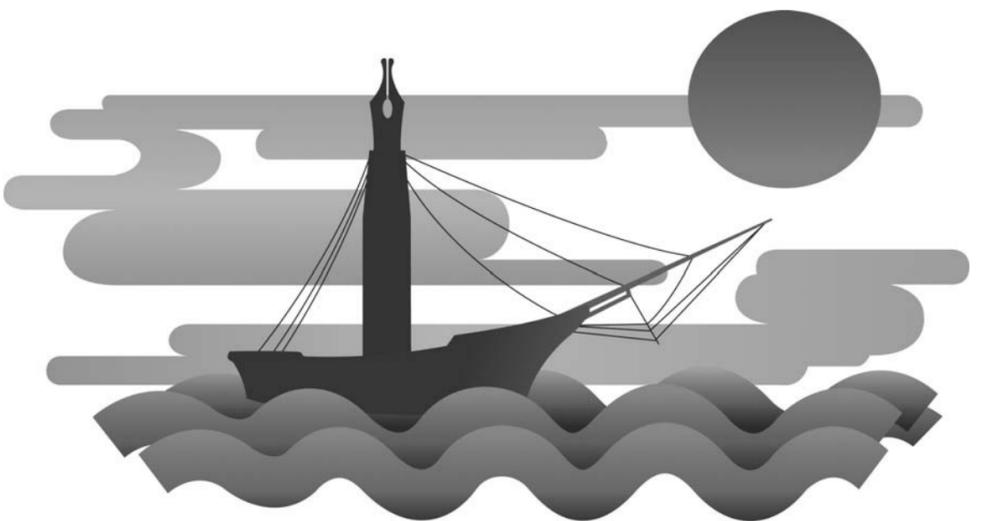
SK하이닉스 역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4개 팹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예정인데 총 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도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이번주 금요수필은 쉽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